

일제 중고 오토바이 ‘달리는 흉기’

폐차 직전 대량 밀수 ... 고장 잦고 무보험·각종 범죄 악용도

광주 대학가·금남로 등 위험한 질주

“중고 일제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벌써 세 번이나 고쳤어요.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처리도 못했구요.”

광주 C대학교에 다니는 이모(23)씨는 지난달 5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현금 100만원을 주고 49cc 일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엔진이 고장 나 오토바이 수리점을 찾았다. 수리비는 대략 20만원. 며칠 후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휘면서 멈춰서는 바람에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것이다.

김씨는 “고장이 너무 잦다”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무보험·무면허 운전이라 피해를 보상받기도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50cc 미만의 일제 중고 오토바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폐기 처분 직전의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파는 탓에 고장이 잦고, 사고가 나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오토바이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은 연간 10만 대 규모. 이중 일본산 등 수입 소형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주로 대학가나 충장로·금남로 등을 중심으로 수입 오토바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장·사고 잦아..업자만 ‘폭리’= 현재 광주·전남 등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제 오토바이는 대부분 폐차 직전의 상품으로 현지에서는 1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나 오토바이 매대센터에서는 대당 100여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젊은층들의 일제 ‘오토바이 붐’이 수입업자와 중간 판매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 셈이다.

또 이들 판매업자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한 뒤 개조해 팔다 보니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후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고장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의 유통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광주시 동구 모 타이어 판매점이 일본에서 대당 10만원을 주고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를 개조해 중고 오토바이 상가에 140만~150만원에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보험·환경규제 안 받아=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현재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폐차 처리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오토바이가 대량으로 밀수입되고 있다. 이들 오토바이 가운데 대부분은 배기가스나 소음 등 환경오염 규제도 받지 않고 판매된다.

또 사고 위험이 커 보험 가입이 힘들고, 원동기 면허증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난을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밖에도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별도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일 오후 광주 모 대학교 건물 앞에 주차된 일본산 오토바이. 광주경찰은 최근 한 타이어 대리점 업주가 일본에서 폐차 직전의 오토바이를 국내로 반입한 뒤 부품을 교체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저앉은 소 확산 축산당국은 ‘쉬쉬’

원인조사 허술 불안

곡성·구례·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저앉은 소(기립불능)’가 하루 사이에 8마리가 늘어나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축산당국은 불명확한 원인조사와 뒤늦은 공개로 허술하게 대처해 축산농가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주저앉은 소는 곡성·순천·구례·화순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106마리로 전남보다 8마리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모기에 의한 전염병인 아가네바병과 췌장병으로 진단된 2마리를 포함해 광우병(소 해면상뇌증)이 아니라고 밝히진 33마리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발병원인 발표와 뒤늦은 공개, 추가 검사 부실 논란이 이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주저앉은 소 발생 사실과 원인을 발표하면서 폭염과 모기에 의한 전염병이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최초 발생 일(8월 16일)보다 2주일 가량 늦은 데다 원인도 정확하지 않다.

첫날 발표한 98마리 가운데 원인이 밝혀진 소는 모기에 의한 전염병 등 2마리뿐이고 살처분된 나머지 31마리도 광우병이 아니라는 검사결과만 확인했다. 나머지 65마리 중에서도 10여마리에 대해서만 혈액검사와 질병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마리를 빼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북과 경북에서도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달 27일 모기 매개질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원침 (8109)



광주 한 여고서 14명 설사·복통

보건소 역학조사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여고등학교 학생들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인 데 이어 북구의 한 여고에서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일 광주북부보건소에 따르면 북구지역 한 여고 학생 14명이 지난달 29일 학교 급식을 먹고 난 뒤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했다. 여학생 14명 중 5명은 호전됐으나 나머지 9명은 이날까지 증세가 이어졌다.

이날 신고를 받은 북구보건소와 광주시 교육청 측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남은 음식물과 식수 등을 수거하고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결별” 내연녀에 생선오물 끼얹어

생선장사를 하던 내연녀가 결별을 선언하며 “일당을 달라”고 항의하자 더러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40대가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생선 노점상 김모(44)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1년 동안 사귀던 내연녀 이모(44)씨의 얼굴에 생선물을 쏟고 먹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와 1년 동안 동거하며 함께 생선 장사를 했던 김씨는 이날 이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물을 끼얹었는데, 경찰에서 “그동안 함께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꼬마 순찰차는 싫어”

운전자들 알잡아보고 업무에도 차질

경찰관 ‘경차 순찰차’ 기피현상 확산

광주지역 경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차 순찰차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동부경찰에 경차(모닝) 순찰차 1대가 처음 배치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남부경찰과 북부경찰에 1대씩(마티즈) 등 모두 3대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예전지 절감과 골목길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경차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경차를 이용해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승차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이 ‘꼬마 순찰차’라고 알잡아보면서 출동시 앞길을 터주지 않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 순찰차가 출동할 경우 취객들이 차량을 밀거나 당기는 등 통변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비좁은 차량 내부도 문제다. 내비게이션·LED경광등·무전기·소화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순찰에 나서고 있지만 경차의 경우 짐 싣는 공간이 좁아 부피가 큰 장비는 구비하고 다닐 수 없다. 뒷좌석에는 민원인을 2명 이상 태우기가 힘들고 덩치 큰 피의자가 저항할 경우 차량이 흔들리는 등 사고 위험도 있다. 경차 근무중인 광주지역 한 경찰관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하는데, 한 운전자가 고의로 앞길을 막기도 했다”며 “경차도 일반 순찰차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행법이 중형차량으로 도주할 경우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예비장교 후보생 모집

전문대생 배제는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예비장교 후보생에 4년제 대학 재학생만 지원하도록 하고 2년제 대학 재학생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7개 전문대학 총장은 지난 5월 “국방부가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 1학년생으로 정해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진학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방부는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예비장교 후보생에게 할당해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음란전단 ‘총배포책’ 40대 검거

서부경찰, 알바생에 일당 주고 배포 지시

최근 음란성 광고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어려워진 자 전단지 배포를 도맡아 해온 이른바 ‘총 배포책’이 직접 나서 전단지를 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10년 전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지난 2008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박모(41)씨. 박씨는 출소 직후부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당 5~7만원을 주고 불법 음란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는 친형(44)에게 넘겼다.

박씨는 지난 6월 초순까지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광주시 서구 상무지

구와 금호지구 일대 유흥가에 음란전단지를 마음껏(?) 뿌렸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박씨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경찰과 서구청 등 유관기관이 지난 7월부터 ‘음란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음란전단지 배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

7월 중순부터는 자신이 고용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란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의 단속에 겁을 먹은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박씨와 연락을 끊고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한동안 단속을 피해 음란전단지를 배포를 중단하자 자신의 광고로

수입을 올리던 친형의 성매매업소는 매출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결국 자신이 직접 음란전단지를 배포해야겠다고 생각한 박씨. 박씨는 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상무지구 일대에 음란전단지를 뿌렸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경찰을 피해 주택가에도 음란전단지를 뿌렸다. 그러나 박씨는 음란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섰던 서구청 단속반에 목격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박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